

제2기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본격 가동

다양한 연령·지역·관심분야 등 대표 도민 120명 구성... 정책 제안·의견 제시·선호도 설문 참여

전북도가 전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제2기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도는 '제2기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 구성에 따른 출범식과 제1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년간 활동한 제1기 참여단에 이어 이번 제2기 참여단은 공개모집, 시·군 추천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지역, 관심분야 등을 대표하는 도민 12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수시로 정책 제안과 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선호도 설문·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제1기 참여단은 6번의 열린 회의를 통해 ▲인구정책 아이디어, ▲코로나19 위기극복 아이디어, ▲비대면 생활 공공서비스, ▲기후변화 대비 방안,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방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방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1차 소통회의는 코로나19

에 따라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120명의 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참여단 회의는 전북의 미래 가치인 '생태문명시대 전환' 4대 분야인 청정전북, 도농상생,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를 주제로 우리 곁에 깨끗한 자연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및 실천방안 발굴'로 열린 토의의 장을 펼쳤다.

참여단은 생태문명을 주제로 한 분야별 온·오프라인 정책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대도약 정책포럼 컨퍼런스, 토론회 등 청중·패널로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전북 소통대로'에서도 자유로운 정책제안 및 도민들의 제안에 공감 및 댓글을 게시하고, 공감 수 부족 제안이나 부서 미체택 제안이 정책화로 이어지도록, 보완 및 지속적인 논의 등을 통한 '숙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도는 참여단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 및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제2기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따른 출범식과 제1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모든 정책의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민 정책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참여단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동네슈퍼, 24시간 불 밝힌다

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모 5개 시·군 선정... 64개소 조성

전북도가 온라인·비대면 등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모에 전주,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등 5개 시·군이 선정돼 64개소의 동네슈퍼를 스마트 슈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가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점포로 전환해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마트슈퍼에는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무인운영안내현관(LED), 주류판매 잠금장치, 기타 보안장치(CCTV)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스마트슈퍼로 전환된 동네슈퍼에는 스마트기술·장비 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도 지원된다.

올해 처음 점포면적 165㎡ 이하 동네슈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지속될 계획이며, 올해 선정된 5개

시·군에서는 관할지역 동네슈퍼 중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면 5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온라인·비대면 유통·소비 환경변화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 자체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250여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룸, 라이브커머스 입점, 상품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스마트 상가로 지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스마트 상점가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중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발... 4월 5~12일 신청 접수

전북도가 22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한 '제8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상 선발은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애 등 총 6개 부문에 각 1명씩으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오는 5월 전북도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북도청에서 도지사가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3년 이내 기간동안 관련 공적이 있는 청소년이다.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대학 총장, 전북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수상 후보자 신청접수는 오는 4월 12일까지 전북도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및 이메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북도내 방역지역 7개 시·군 16개소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는 지난 2월 9일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부안군 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22일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16일 만이다.

도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동

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남원·임실(2월 2일), 익산·김제(3월 3일), 정읍·고창·부안(3월 12일~3월 22일)이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닭·오리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정밀검사 강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인 3월 28일까지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소독, 가금농가 차량 진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 운영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이 직접 14개 시·군 체험관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은 어린이 대상 창작 인형극·마임극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올바른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지역 격차 없이 경험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방식인 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 35회 제공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7월부터 총 25회에 걸쳐 시·군 순회 공연할 예정이다.

시·군에서 20회,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5회 제공할 계획이며, 공연은 1회당 50분간 진행되는 인형극·마임극 형태의 창작극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할 극단을 오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하며, 응모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인형·마임극단이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창작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극단이 공모에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사회복지법인 특별 지도·점검

전북도, 시·군 합동으로 120여개소 대상 실시

전북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자,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질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 운영과 재무 회계 등에 중점을 두고, 법인별 3년 주기로 매년 40여 개소씩 지도·점검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법인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는 올해 3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120여 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과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와 갑질, 직원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점검결과 위반정도가 경미

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법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재정적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 사회복지사회협에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070-4447-2877)와 홈페이지(<http://www.selfcare.com>)를 통해서 상시 가능하며,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이번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부분까지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